

데스크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최근 만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유력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은 씁쓸했다. 경선 승리 이후, 공약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몰랐더니 “그동안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일추 만들면 된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당선에는 문제 없다는 것이다.

본선에서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오전과 오후에 유세차로 지역을 한 바퀴씩 돌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캠프 조직원들에게는 “점심 먹고 나오고 저녁은 집에서 가족들과 하라고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경선에서 비용이 발생한 만큼 본선에서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웃자고 한 소리였지만 그냥 웃어넘기기 힘든, 6·13 지방선거의 민주당 독주 구도를 보여 주는 호남의 현실이기도 했다.

은편칼럼



박행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오드리 험번을 닮은 미모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연사로 활동하고 다양한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 유명한 ‘소피아’가 네팔에 왔다.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에 참석하여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학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청중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언론과 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소피아는 재색을 겸비한(?) 여성이 아니라 사실은 홍콩에 있는 미국의 헨스 로봇사(Hanson Robotics)가 2015년 4월에 제작하여 이제 만 3년 된 로봇이다. 오드리 험번의 얼굴을 본뜨고 그녀 못지않게 유명한 여배우 소피아 로렌을 연상케 하는 ‘소피아’로 불린다. 대개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또는 humanoid

기고



백희정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

여성의 사회참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투(#me too, #with you) 운동을 시작으로 성평등, 여성 주권 향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저임금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을 감당하며 경제 참여, 정치적 권한에 있어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차별적이고 여성의 낮은 위치성은 존재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냉철한 선택이 호남의 미래다

이처럼 민주당 독점 구도의 폐해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율은 90%대에 이르고 이를 바탕으로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도 70%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자릿수 지지율에 허덕이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뒤늦게 후보를 내고는 있지만 고공 지지율을 토대로 하는 민주당 주자와의 경쟁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민주당 독점 구도의 재현

경쟁 구도의 붕괴로 인해 ‘경선이 곧 본선’이 되다시피 하자 민주당 내 예비 후보들 간의 이전투구(泥田鬪)가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공약 경쟁은 사실상 실종되고 고소·고발과 비방·폭로가 난무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도, 경쟁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유권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모 예비 후보 측에서는 경선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쟁 후보의 전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해 전파하는가 하면 또 다른 예비 후보 진영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무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공약과 비전 제시를 통해 지지층을 다지

보다 학연·지연과 이해관계 등이 맞물린 조직 선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선 일정에 따른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 간의 줄 세우기와 합종연횡도 횡행하고 있다. 온갖 편법도 속출하고 있다.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에 대비,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대기시키는 교육은 기본이다. 지지자들의 휴면 휴대전화를 살리개 하는가 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지역에 등록하게 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20대의 응답률이 낮고 50~60대는 마감이 빨리 이뤄진다는 점에서 핵심 지지자들에게 전화로 20대 20대로 답하라는 지침도 내리고 있다. 이밖에도 경로당 등에 사람을 보내 어르신들의 안심번호 투표를 도와주며 지지율 유도하는 등 탈·편법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촉박한 경선 일정도 ‘깜깜이 선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경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에 따라 예비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후보 압축을 통한 광주시장 후보 1차 경선은 2주의 시간만이 주어져 18일부터 투표가 시작된다. 전남지사 후보 1차 경선 기간은 불과 10일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TV

토론은 단 한 차례만 이뤄졌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이 이러한 상황인데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가 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 출마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허다하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비전과 역량이 기준 돼야

이번 지방선거는 호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보수 정권 9년 동안 뒤처져 있던 지역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당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지지의 절대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대권 불임 지역에서 벗어나고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후보들의 정치적 비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결국 답은 호남 민심의 냉철한 선택으로 귀결된다. ‘묻지마 투표’로는 호남의 미래를 열 수 없다. 호남 민심이 경쟁과 견제를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 호남 민심의 역량이 결집하고 증명돼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6월 지방선거, 호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tuim@kwangju.co.kr

社說

광주 서구 갑 전략공천…재·보선에도 관심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상 지역이 열 곳에 이르면서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광주 서구갑과 영암·무안·신안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일곱 곳이며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잇따라 출마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세 곳이다. 민주당에선 김경수·양승조 의원이 각각 경남과 충남 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경남 김해율과 충남 천안병이, 자유한국당에선 이철우 의원이 경북 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경북 김천이 포함됐다. 이 중 광주 서구갑의 경우 민주당에서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이곳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선정해 과연 누가 전략공천 대상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박 전 의원을 염두에 두고

여성 인사를 추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에서는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날 출마 선언 후 일찌감치 표방 같이 나왔다. 영암·무안·신안은 민주당의 경우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경선을 벌이는 것으로 확정됐다. 평화당에서는 이윤석 전 의원이, 한국당에선 주영순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수도권과 호남·영남·충청 등 전국에서 고투 치러져 ‘민심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 차이가 5석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따라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녹색 돌풍’으로 빼앗긴 지역구 탈환을 위해, 평화당 등 야권은 지역구 수성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 재·보선 또한 지방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유권자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친목 단체’로 전략한 광주 지역 경제 단체

지역 경제 단체들의 역할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광주 지역 경제 단체들은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 주요 경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계 최대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에 대한 기업 의견과 지원 사항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건의해 예상되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의 경우 회원으로 속한 2550여 개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광주고용지침 내 관할 지역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

는지, 예상되는 비용 부담이나 필요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근로 가산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실태 사서는커녕, 간단히나 설문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말이 무색한 형편이다. ‘경제인 친목단체’로 전략한 지 오래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 사항을 듣고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 건의해 도움을 줘야 하는 경제단체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경제단체들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지역의 경제 현안 해결 방안을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국 후한말 조조는 원소(袁紹)와 천하의 패권을 놓고 큰 전투를 벌인다. 전투에서 조조 부대가 포위돼 궁지에 몰린다. 그러던 중 원소의 측근이었던 허유가 투항해 오고, 조조는 허유가 제공한 정보로 원소 부대의 식량 창고를 기습해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이를 관도대전(官渡大戰)이라 부른다. 적벽대전, 이릉대전과 함께 삼국 시대의 흐름을 결정지었던 중요한 전투로 꼽힌다. 전투에서 승리한 조조 측은 원소가 남긴 각종 편지와 문서들을 전리품으로 얻었다. 편지와 문서에는 원소와 내통하고 있던 조조 측 사람들이 이야기도 많이 거론되어 있었다. 몸은 조조 측에 있었지만, 판세가 정확하지 않아 양측을 넘나들며 양다리를 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조조 측 관리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조조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은 채 모두 불태워 버리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지시했다. 배신자를 색출해 처형해야 한다는 부하들의 주장에 대해 조조는 이렇게 대답했다. “원소가 극성할 때 나 역시 승리를 확신할 수 없어 마음이 흔들렸는데, 어찌 나에게 절대 충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

겠는가.” 이 말을 들은 많은 주변 사람들은 조조의 관용에 감동했다고 한다. 조조가 편지를 모두 불태우면서 마음을 졸인 수많은 관리들에게 자신의 배포를 과시하고 충성심을 유도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구태 정치로 꼽히고 있는 지역 정치권의 줄 세우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위원장과 국회의원 후보들의 눈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지지를 보내는 예비후보들도 상당수고, 일부 공무원들 의 출세가 지적돼 나오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자리 보존이 중요한 원소와 내통하

조조의 관용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